

한선 프리미엄 리포트

HANSUN PREMIUM REPORT

[주 제] 새로운 한중관계의 모색

[발제자] 이정남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교수

[일 시] 2017년 12월 07일(목) 오전 07시 30분

[장 소]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문자 후원

#7079-4545

제274회 정책세미나 주요 내용

요 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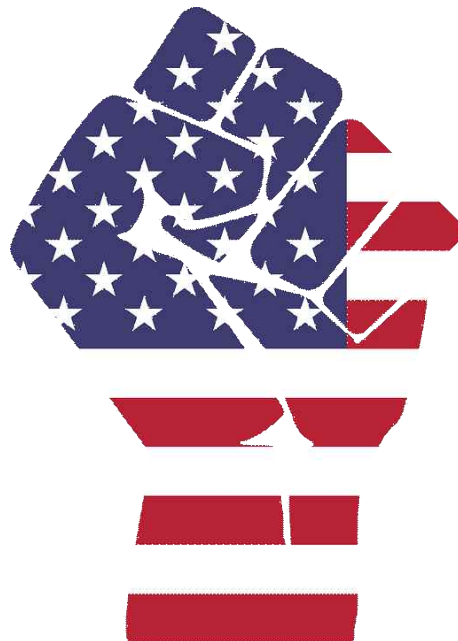
■ 중국은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용납하고자 하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 전체가 어려울 경우라도 북한만은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시진핑은 19차 당 대회 보고에서 중국이 새로운 역사발전단계로 진입했음을 총 36차례나 언급했다. 중국이 맞이한 신시대는 전면 소강사회(小康社会,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가 최후의 승

리이고, 사회주의 현대화와 강대국 시대의 전면적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의 실현의 시대로, 중국이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 인류를 위하여 더 큰 공헌을 하는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 지난 5년간 중국외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해 오고 있다. 덩샤오핑 시기의 도광양晦(韜光養晦,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정책에서 국제사회에서의 강대국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분발유위(奮發有爲,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한다)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 성과와 대외정책 방침을 보다 명료화했다. 세계경제발전 공헌율 30% 초과, 일대일로, AIIB, G20, 브릭스 정상회담 등에서 국제적 영향력 제고, 금융이나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담론권의 대폭적 확대, 인민폐의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앞으로 강대국으로서 더욱 더 적극적인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 대한민국은 새롭게 재편될 동아시아 신질서에서 한중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거시적 비전하에서 재구성해 가야 한다. 향후 상당기간 한국이 마주할 중국은 동아시아지역의 신질서를 수립하고자 미국과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강대국 중국으로서 이것은 시진핑 2기에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지역의 질서변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의 한복판에 북핵문제라는 난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지혜롭게 이 상황을 관리하여 통일을 이끌어낸다면 새롭게 구축되는 동아시아 신질서에서 이 지역의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 가능성도 있다. 우리에게 역사적 위기와 기회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 시진핑 2기 정권의 등장 : 중국의 아시아 전략 분석



- ◆ 중국의 부상으로 미국 주도로 유지되어 온 전후의 동아시아 질서가 전환되고 있다. 중국은 동아시아에서 출발하여 지역 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공고화하면서 장기적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과 맞먹는 초강대국으로 부상한다는 전략을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지역의 주도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반격, 일명 ‘아시아 회귀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활용한 공세적(Assertive) 대응으로 미중 간 치열한 주도권 경쟁이 진행 중이다. 비록 트럼프 등장 후 미국 우선주의가 제기되었지만 동아시아에서의 미국의 주도권을 놓지 않겠다는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 ◆ 중국은 현재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중국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고,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몇 개의 차지역(Sub-region)을 정한 후, 각 지역에서의 최강대국, 거점국가 등의 설정을 통해 차등화 된 대응방식을 취하고 있다. 중국 주도의 동아시아 질서 및 거버넌스 구상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한국을 동아시아의 차지역 동북아시아의 거점국가로 간주하면서 중국의 거버넌스 틀 내로 들어오게 하거나 최소한 미국과의 관계에서 중립화를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념과 체제가 달라도 공고한 협력관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어 중국의 주변부 정책의 모범사례로 삼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중국은 동북아 특히 한국에 대한 영향력에 강한 집착을 갖고 있다. 시진핑 정부 등장 이후 강대국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강대국 외교를 본격화하면서 한반도 전체를 중국의 영향력권 안에 두고자 하는 구상을 더욱 더 구체화 해오고 있다.
- ◆ 중국은 한반도가 미국의 영향력권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한반도 전체가 어려울 경우에도 북한만은 절대로 놓지 않을 것이다. 중국의 일부 전문가들은 ‘동아시아로 범위를 좁혀서 보면 미중 경쟁에서 저울의 추는 이미 중국으로 기울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트럼프의 등장 이후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과 주변국의 관계가 중심국과 주변국의 관계로 관계의 성격이 전환되면서, 과거 조공질서와 달리 21세기 식의 중심과 주변의 관계를 어떻게 수립하면서 이 지역의 질서를 제도화할 것인가는 중국의 주변외교의 핵심 내용이 될 것이다. 사드문제는 한중관계의 이러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 대표적인 사건이다. 사실 미중 간 경쟁 구도 속에서 한국의 선택적 딜레마는 다양한 사건에서 이미 나타났다. 사드문제는 중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미국과의 전략적인 균형이 파괴되는 심각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중국은 이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판단해 자신이 지닌 국력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을 분명하게 길들이겠다는 중국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중국의 한 전문가는 “이번 사드를 사례로 중국이 한국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함으로써, 다른 주변국들이 중국의 국익을 해칠 경우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 19차 당대회와 중국의 21세기 미래 비전

: ‘개혁개방 시대’에서 ‘강대국 시대’로 전환 선언

- ◆ 시진핑은 19차 당대회 보고에서 총 36차례나 언급할 정도로 중국이 새로운 역사

발전단계로 진입했음을 강조했다. 중국이 맞이한 신시대는 전면 소강사회(小康社會,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가 최후의 승리이고, 사회주의 현대화와 강대국 시대의 전면적 건설과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의 실현의 시대로, 중국이 세계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 인류를 위하여 더 큰 공헌을 하는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 ◆ 첫 단계인 2020-2035: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強國)’ 건설: 이 단계는 경제발전만이 아니라 과학기술, 지역과 계층 간 격차해소, 법치와 현대적 거버넌스의 제도와 능력의 실현, 소프트파워 증강, 사회적 거버넌스 제도의 발전, 환경문제 해결 등 경제를 뛰어넘어 전방위적인 선진국 달성이 목표이다. 두 번째 단계인 2035-2050: ‘종합국력과 국제 영향력에서 선도적인 강대국’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1980년대 초반 덩샤오핑이 21세기 중엽까지 중등 수준의 선진국에 도달한다는 목표를 최소 15년 이상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 ◆ 시진핑은 사회주의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과 개혁개방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끌어낸 덩샤오핑에 버금가는 위상을 확보하려 한다. 지난 5년간 반부패투쟁의 전개, 원로정치 영향력 제거, 당내 각종 소조의 건설에 기초한 이른바 ‘소조정치’를 통해 권력을 집중하고 있다. 그 결과 당내 지도 ‘핵심’의 지위를 부여받고, 19대에서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의 당장(黨章) 삽입으로 정치와 사상적 지위가 최고봉에 이르렀다. 글로벌 강대국 중국을 이끌고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실현시킬 새시대의 지도자 반열에 올라섰다.
- ◆ 시진핑 사상은 강대국 중국을 이끌어갈 지도사상으로써, 마오쩌둥이나 덩샤오핑의 사상과 대비된다. 시진핑의 ‘상징적’ 지위는 25여 년 동안 작동해 온 권력승계의 일부 관행(격세지정, 민주추천회 등)이 중단되고, 공산당 내 최고 지도자 집단(정치국상무위원, 정치국원, 중앙위원회위원, 기율검사위원 등)의 인사배치에서 시진핑의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전진 배치되면서 실질적인 힘을 발휘할 것이다. 장쩌민, 후진타오 시기를 거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상호간 견제와 균형, 합의를 통한 정책결정을 추구해온 집단지도 체제는 형식상 여전히 유지되고 있지만, 내용상으로는 견제와 균형의 기능보다는 시진핑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조하는 역할로 형해화되고 있다. 19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사상을 제시하고, 중국이 처한 현시대의 성격, 모순구조, 신 목표를 가능하게 하는 신 방책을 제시했다. 이것이 ‘강대국 시대로 진입한 중국의 사회주의이론’으로, 강대국 중국의 비전과 전략이다. 그러나 글로벌 강대국으로서 신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비전으로서는 다소 실망스러워 보인다. 19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비전은 상징적이고 개념적인 내용을 포괄하는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새로운 시대와 새로운 과제를 부여받았다는 수준에 그쳤다.

◆ 19차 당대회와 중국의 대외전략

: 새로운 강대국 외교를 통한 新국제관계의 추진

- ◆ 지난 5년간 중국외교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해 오고 있다. 덩샤오핑 시기의 도광양晦(韜光養晦,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때를 기다리며 실력을 기른다)정책에서 국제사회에서 강대국으로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분발유위(奮發有爲, 떨쳐 일어나 해야 할 일을 한다)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 성과와 대외정책 방침을 보다 명료화 했다. 세계경제발전 공헌율 30% 초과, 일대일로, AIIB, G20, 브릭스 정상회담 등에서 국제적 영향력을 제고, 금융이나 글로벌 거버넌스 측면에서 담론권의 대폭적 확대, 인민폐의 국제금융시장에서 영향력이 확대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중국은 앞으로 더욱 더 적극적인 강대국 외교를 전개할 것으로 보인다.



- ◆ 19대 이후 중국의 외교정책은 ‘언유행강(言柔行剛, 말은 부드럽게 행동은 단호하게)’의 색채를 띠 것으로 보인다. 말이나 행동에서 일정 정도는 자제를 하고, 협력과 윈윈의 외교이념과 인류운명공동체를 강조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영토와 안보관련 핵심문제에 대해서는 강경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2035년까지 전면적인 현대화 건설단계로 설정하고, 2050년까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있는 강대국으로 나간다는 계획이 중국의 대외정책 추진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35년까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균형적 성장을 통한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미국을 대체하여 패권적인 지위를 추구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내부적으로 경제발전과 군사력, 문화와 과학기술 등의 발전을 통해 선진국으로서 명실상부한 종합국력향상을 추진하고, 외부적으로는 글로벌 거버넌스 건설에 주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함을 분명히 하려 한다. 따라서 집권 2기로 들어선 시진핑은 글

로벌 강대국으로서 기후, 테러, 통상, 인민폐의 국제화 등 다양한 국제적 이슈를 중심으로 하여 글로벌 거버넌스 개혁을 주동적으로 추진해 갈 것이다.

- ◆ 주변국에 대해서도 중국 주도의 신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정책을 취해 갈 것이다. 주변국외교와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서 경제력에 걸맞는 중국의 영향력 확장을 본격화 할 것이고, 그런 점에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중국 주도의 신질서 속으로 한국과 주변국을 견인하기 위한 경쟁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그러나 집권1기에 외교의 최우선 순위로 삼았던 주변외교는 현실적으로 많은 난관에 직면해 있다. 동중국해, 남중국해, 북한핵, 타이완문제 등 모든 이슈들이 쉽게 타개책을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 중국의 전문가의 말대로 당분간 주변외교보다 글로벌 외교에 주력한 후 그 성과를 기초로 해서 다시 주변외교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당분간 북핵문제나 한반도정책에 있어 ‘위기관리’를 중심 기조로 하면서 그다지 주동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 한중관계 25년 평가와 전망

: 중국의 한반도 문제 접근에 대한 기본적 시각

- ◆ 중국은 한반도문제를 철저히 세계전략적차원에서 접근해 오고 있다. 한반도 문제를 한중관계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미전략차원에서 보고 있다. 특히 한반도가 해양세력이 중국을 침입하는 다리 역할, 또는 중국을 포위하는 연합세력의 한 고리 역할을 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전략적인 목표를 지니고 있다. 1949년 신중국 수립 이후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시키려 노력해 오고 있다. 냉전기에는 방어적인 형태로, 1992년 한중수교 이후에는 보다 적

극적인 형태로, 미중경쟁이 강화된 2010년 이후에는 보다 공세적인 형태로 추진해 왔다. 중국의 대북, 대한민국, 통일문제에 대한 시각 모두 이런 연장선에서 봐야한다. 민감한 안보이슈(북중동맹, 한미동맹 등)를 미룬 채 경제와 사회문화교류를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은 20여 년의 중국특수를 누렸고, 중국 역시 비록 전체 중국경제에서 큰 비중은 아니지만 한국의 기술과 투자를 세계 2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하는데 활용해왔다. 그러나 중국이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하면서 한중관계는 새로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글로벌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이 미국과 동아시아지역에서 본격적으로 주도권 경쟁을 시작하면서 한중 간에 그동안 잠복되었던 안보문제가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했기 때문이다. 미국은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전개하고 한국이 일본과 함께 동아시아에서 중국견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반면 중국은 한국이 미일과 결합하여 대중국 견제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한국에 대한 견인정책을 펼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런 전략적 구도속에서 시진핑 1기에 한중관계는 전례없이 발전하는 듯 보인다. 시진핑은 ①이념과 체제가 달라도 중국과 강고한 전략적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과시하고, ②반복되는 핵과 미사일 개발로 통제가 어려운 북한을 견제하며, ③미일동맹과 결합하여 중국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한국을 견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중관계 발전에 적극적이었다.

- ◆ 한국정부는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중국의 전통적 대북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어 한국 중심의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도록 하겠다는 의도하에 한중관계 발전에 적극적이었다. 그 결과 ‘반(反)파시즘 및 항일전쟁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박근혜 대통령은 동맹국 미국의 불편한 심기에도 불구하고 천안문 망루에 시진핑과 나란히 섰다. 그러나 북한의 핵보유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한국정부가 이러한 북핵에 대한 억제수단으로 미중 간의 첨예한 전략적 쟁점이 되고 있는 사드배치를 결정하면서 한중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다. 중국정부는 그동안 대한민국 견인정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경제교류와 협력의 성과를 역으로 한국을 견제하고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였고, 한중관계는 일순간에 경직되었다.
- ◆ 최근 중국내에 북한 핵문제가 임계점에 도달했으며, 중국과 국제사회가 더 이상 북핵문제 해결을 미룰 수 없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따라서 시진핑은 사드문제를 이른바 ‘3불(사드 추가 배치, MD체제 가입, 한미일 동맹추진하지 않음)’의 천명수준에서 봉인하고, 북핵문제에 대한 한중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입장에서 한중관계 개선은 ①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의 협력의 필요성뿐만 아니라, ②통제되지 않는 북한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도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③한중관계 악화가 장기화될 경우 한국이 미일동맹과 결합강도를 강화해 한미일동맹관계로 진전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중관계가 사드사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째, 중국외교에서 한국이 점하는 비중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다. 경제

적으로 수교초기 중국은 한국의 기술과 투자가 필요했지만 이제 양국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경쟁상대일 뿐이다. 안보 측면에서도 중국과 미국의 주도권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면서, 한국은 양자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특히 북한의 핵보유가 현실화되면서 한미동맹의 핵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진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와 이것에 비판적인 중국 사이에서 외줄타기를 지속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의 태도에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제기할 것이다. 실제로 사드문제 합의 이후 다수 중국학자들은 이른바 ‘3불’정책에 대한 한국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나타내고 있다.

- ◆ 둘째, 한국의 입장에서 통일과 경제발전을 위해서 중국이 여전히 주요한 협력대상이지만, 점차 현실이 되고 있는 북핵위협으로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중국의 비판적 시각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또한 사드사태로 한국의 기업들도 지나치게 중국에 비중을 둔 경제교류의 취약성을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인지하게 되었다. 향후 한중관계는 경제적으로 협력보다 경쟁이 부각될 것이고, 핵심안보 이슈에서도 갈등이 반복적으로 출현할 수밖에 없다. 한중관계가 중국의 생각대로 발전되지 않을 경우, 중국이 한국을 ‘패싱’하면서 미국과 한반도문제를 ‘거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북한 핵을 포함한 한반도문제 해결에서 한국이 일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지렛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미국과 중국 외에도 일본이나 러시아, 동남아, 유럽국가들과 관계 강화를 통해 외교관계를 다변화해야 한다. 동시에 북핵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흐름에 동참하면서도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평화를 이룩하는 데 있어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인식하도록 해야 한다.
- ◆ 새롭게 재편될 동아시아 신질서에서 한중관계를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라는 거시적 비전하에 한중관계를 주동적으로 재구성해 가야 한다. 향후 상당기간 한국이 마주할 중국은 부강한 국력에 기반하여 동아시아지역의 신질서를 수립하고자 미국과 본격적으로 경쟁하는 강대국 중국. 이것은 시진핑 2기에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강대국 중국의 회귀로 동아시아지역의 질서변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의 그 한복판에 북핵문제라는 난제가 있다. 대한민국은 이를 지혜롭게 관리하여 통일을 이끌어낸다면 새롭게 구축되는 동아시아 신질서에서 이 지역의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 가능성도 있다. 미중 등 주변 강대국의 전략적 구상을 정확히 파악하고 한국의 의도가 최대한 관철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재구성해갈 때, 새롭게 재편될 지역질서에서 한국 역시 적절한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 질의응답

[질문 1] 북한 핵 문제가 더 악화될 경우 문재인 행정부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에 가입하지 않고 ▶한미일 3군 군사동맹으로 발전하지 않으며 ▶사드 추가배치 불가 등 이른바 ‘3불(不) 정책’을 부정할 가능성이 있는가?

[답변 1] 외교적인 약속이 무척 중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생존이라고 본다. 북핵 문제가 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면 우리 정부에서도 충분히 고민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질문 2] 우리가 중국의 지도자 선출 방식을 배워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답변 2] 중국 정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40년간 당원으로 활동하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평가를 반복한다. 최종적으로 선거를 통해 선출이 된다. 능력 없는 사람이 우연히 인기를 바탕으로 지도자가 되는 경우는 없다. 문제는 실적이나 성과의 기준이 당 중심이라는 점이다. 중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민주주의 사회의 리더이기보다 당의 생존과 당의 목표가 우선시 되어야 하는 지도자였다. 중국 지도자 양성 방식은 따르되, 내용을 민주사회에 걸맞은 리더 양성으로 변경한다면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이라고 본다.

※ 이 자료가 도움 되었다면 #7079-4545로 ☎ 문자 한 통 보내주세요^^ (한 통 2,000원)